

전기차 초급속 충전 경쟁 치열… 인프라·안전성 확보는 뒷전

5분 충전으로 수백 킬로미터 주행 배터리 과부하 등 사고 요인 우려 “기술 상용화, 좀 더 지켜봐야”

중국 전기차·배터리 기업들이 5분 충전 4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초급속 충전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실로 다가온 초급속 충전 기술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인프라와, 안전성 문제에 여전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BYD는 5분 충전으로 4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초고속 충전 기술 ‘슈퍼 e-플랫폼’을 도입 할 예정이다. ‘슈퍼 e-플랫폼’은 최대 전류 1000암페어(A), 최대 전압 1000볼트(V)의 고전압과 1000kw의 충전전력을 제공한다.

테슬라 최신 슈퍼차저(최대 500kW) 보다 2배 빠른 속도로 내연기관 주유 시간 수준으로 짧다.

또 다른 중국 기업인 닉스다이(CA



서울 소재 한 대형마트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

사 충전소를 사용해왔는데, 이번 초급 속 충전을 위해 자체 인프라 구축을 선언한 것이다.

CATL 역시 2세대 선싱 배터리가 올해 67종의 전기차(EV) 모델에 탑재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초급속 충전 기술이 상용화 될 경우 배터리 수명과 에너지 밀도도 높아져 전기차의 성능 자체가 더욱 향상되는 것을 의미한다. 가격까지 낮출 경우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를 대체 할 수도 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중국이 결과를 올해 보여주겠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 있다는 이야기로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며 “내연기관 주유시간과 동일하게 걸리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의 본격적인 활황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인프라와, 안전성 문제에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과도한 충전

속도는 배터리에 과부하를 줘 배터리의 수명 감소와 배터리 과열로 인한 화재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초급속 충전소를 대규모로 설치하기 위한 인프라를 갖추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초급속 충전은 고출력 전력을 필요해 전력망 강화가 필수다. 기존의 전력망은 고출력을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력 공급에 문제가 없게 배선작업을 다시 설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술적, 경제적 투자 부담이 큰 상황이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도 5분에 400km 주행이 가능한 기술이 있지만 안전성 문제에 우려가 많기 때문에 개발에 적극적인 모습은 아니다”라며 “중국의 경우 정부가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며 기술경쟁을 유도하고 있어 개발 속도가 빠른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상용화까지는 지켜봐야 기술의 안전성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중기부, ‘기술 서비스’ 수출기업 지원 강화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 中企 모집
클라우드 등 3대 기본서비스 특화

정부가 ‘기술(테크) 서비스’ 분야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늘린다. 소상공인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돋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한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디지털·인공지능 등 테크 서비스 분야 수출 확대를 위한 ‘테크서비스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우선 수요 및 활용도가 높은 기술 분야 ‘3대 기본서비스’를 특화해 지원한다. 기본서비스는 ▲클라우드 활용 ▲데이터센터 활용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등 그동안 수출바우처 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없었던 분야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화 분야는 기본서비스에 제한하지

않고 현지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경비, 수출용 가상현실 제작비 등 업종별 다양한 특성을 반영해 사전심의를 거쳐 지원한다.

아울러 기존 수출바우처 사업의 14개 메뉴관 중 수출 과정에 필요한 서비스 메뉴도 기업이 자유롭게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디자인 개발, 전시회, 특히·자재권, 인증 등 14개 분야에 걸쳐 8000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출바우처는 수출에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 등을 기업이 필요한 만큼 활용해 수출 역량을 강화하는 수출지원 사업이다. ‘테크 서비스 수출바우처’ 사업에서도 동일한 수출 마케팅 분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는 또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수출 컨설

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도 30일부터 모집한다.

특히 올해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강화 조치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수출 컨설팅과 연계, 컨설팅을 통해 도출한 과제의 이행을 위한 바우처도 지원한다. 바우처는 수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KB금융그룹이 출연한 재원을 활용한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우리나라 수출기업(약 9만 5000개사)의 56% 이상이 소상공인이고 화장품, 식음료 등 소비재 분야에서 소상공인의 수출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며 “수출 컨설팅 지원사업을 비롯해 소상공인이 수출을 통해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100만 폐업시대 현실로… 소상공인 지원정책 시급”

소공연 110여개 정책과제 발표

“골목을 밟히던 소상공인들이 바람 앞의 쇄불이 되어가고 있다. IMF 때보다 더 심각한 내수침체 속에 100만 폐업시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긴급지원금 지급과 전담 차관 신설 등을 포함한 110여 개의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100만 폐업시대에 대비해 차기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소공연은 29일 서울 여의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정부 소상공인 정책과제’를 공개했다.

이번 과제는 수개월간의 발굴 작업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2025년 소상공인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인사를 전하고 있다

과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정책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위기 극복 ▲지원·인프라 강화 ▲법·제도 개선 ▲사회안전망 구축 ▲혁신성장 기반 마련 등 5대 아젠다를

중심으로 핵심 25대 과제와 분야별 90대 과제를 포함한 총 110여 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연합회는 지난 17일부터 6일간 전국 소상공인 1050명을 대상으로 정책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소상공인들은 긴급지원금 1000만 원 지급과 중기부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송치영 연합회장은 “국난의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이번 대선은 ‘소상공인 대선’이 되어야 한다”며 “극빈층 전략과 지역경제 붕괴, 국가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 확실한 비전과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KCC, 창호 유통시장 본격 진출

‘유통 이맥스 클럽’ 마케팅 강화

KCC가 ‘유통 이맥스 클럽(e-MAX Club Prime Distributor)’을 확대하는 등 창호 유통시장을 주가로 공략한다.

창호 브랜드 ‘Klenze’를 통해 프리미엄 창호 시장을 선도하는 동시에 고객 접점인 유통 부문에서 영업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29일 KCC에 따르면 최근 유통 이맥스 클럽에 신규 창호 우수 대리점 30개를 추가하고, 유통 이맥스 클럽 BI 리뉴얼을 단행했다. 또 기존 삼성카드, 현대 카드 제휴에 이어 롯데카드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며 소비자들의 금융 혜택

의 폭을 넓히는 등 마케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유통 이맥스 클럽’은 KCC가 대리점의 창호 가공 기술과 사후 관리(A/S)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인증하는 프로그램이다.

유통 이맥스 클럽 확대와 함께 KCC는 가공 품질, A/S 만족도, 고객 평가 등 주요 항목을 세분화 해 유통 이맥스 클럽 회원사를 ‘플래티넘(Platinum)’과 ‘스타(Star)’로 등급화했다. 해당 등급에 따라 본사의 지원 규모를 확대해 대리점의 가공 및 서비스 품질을 더욱 높여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